

제348회 국회 (임시회) 저출산·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(부록)

국 회 사 무 처

일 시 2017년1월18일(수)

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

【서면질의서】

○권미혁 위원 2

【서면답변서】

○보건복지부 5

* 서면질의서

권미혁 위원

(총 2 면)

<저출산 특위 세션질문> 제3차 회의 (2017. 1. 18.)

2017.1. 18,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업무보고 질의 / 국회의원 권미혁

제3차 저출산 대책 목표(2020년 합계출산율 1.5명) 가능한가

■ 보건복지부 차관께 질의

-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작년(2016년)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34만 9천명에 불과하며, 2,3분기 합계출산율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1.16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
 - 복지부차관, 이 정도면 2005년 “저출산·고령화기본법”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약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실패였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음. 어떻게 평가하는지?
 - 이렇게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, 작년에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2016~2020년)의 2016년도 목표 합계출산율 1.27명 달성도 불가능함. 원인은 무엇인지? 대책은 있는지?
- 집값, 청년실업을 증가, 특히 올해 지난해 1~10월 결혼 건수가 22만7900건으로 역대 최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합계 출산율 증가 목표 실현은 요원함
 - 3차 기본계획의 최종 년도인 2020년까지의 합계출산율 1.5명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?
 - 정부 스스로가 정한 합계출산율 실현을 위한 저출산 대책 원점 재검토가 절실. 정부의 대책은?
- 복지부 차관님,
 - 사회의 변화,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률혼, 혈연 가족을 우선하는 가족 정책을 탈피한 미혼/비혼 유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등 “다양한 가족” 포용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.
 - 제3차 저출산 대책에도 법무부, 여가부, 복지부의 공동과제로 “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-포용적 가족관 형성”과제가 포함되어 있지만, 구체적인 실행계획,

부처 간 노력 내용도 없음

- *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·일반가정, 다문화 가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,
 - * 법무부는 사실상 집행 내역이 없음(자료요구 결과).
 - * 복지부도 입양가족 양육지원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음
- “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-포용적 가족관 형성”(과제 2-2)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대비 공동 소관부처인 여가부-법무부-복지부의 활동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은?

**가정양육수당 정부 보조율 31% 수준.
아동수당 도입 등 근본대책 적극 검토 해야**

-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12월에 발간한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의 “2011~2015년 영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분석결과”를 보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매우 낮아 0세아 3.5%, 1세아 27.8%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 가정양육에 의존하고 있음.
-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부모들이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월 평균 64.6만원, 비혈연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하는 비용은 월 평균 80.7만원에 이릅니다. 이에 반해 정부가 이들 가정에 지원하는 “가정양육수당”은 최대 31% 보전 수준에 불과하여, 가정양육의 경우 부모의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, 정부가 양육부담을 덜어 준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임. 연령과 시설에 따른 복잡한 이용 및 정부 지원 체계의 통일도 시급함
- 복지부 차관개 요청함
 - 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양육, 유치원 등 양육/보육/교육 형태별로 영유아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총 보육 비용과 정부의 비용보전 수준을 비교점검하고, 정부 보전 수준 상향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.
 - 동시에 양육 형태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등 복잡한 제도를 통일하는 영아를 포함하는 “아동수당” 등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를 요청함
 - ② 2013년도부터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등을 통해 추진하던 “유보통합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?
 - 제3차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데, 3~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재일(지방교육재정교부금)과 교육과정(누리과정) 통합 - 유치원·어린이집 정보공시 연계-결제카드 통일 이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및 처우 격차 해소 문제, 어린이집-유치원 평가체계 통합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함

“성 평등”없는 저출산 대책은 허구, 공직사회 인식 제고 대책 필요

- 안행부의 “출산지도”가 논란이 되면서
 - 출산안하는 여성은 ‘군대 보내라’는 등 여성 혐오 확산과 동시에
 - 사회경제 활동을 희망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음
 -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핵심에는 여성의 “인권”, 남성과 대응한 사회적 욕구를 가진 “인격체”로 보는 것이 아니라, “출산도구”정도로 보는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가부장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.
- 저는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마인드 자체의 “리셋”이 절실하다고 봄
 - 프랑스 등 선진국씩 예에서 확인하듯이 “여성 인권, 평등 수준”이 높을수록 저출산 극복도 쉽고, 출산율도 높은 것이 명백함
 -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는 여성혐오가 확산되는 “여성 삶의 현실”에 대한 개선 대책없이 “가임기 여성 결혼-출산” 확대 대책만 존재함. 여성들이 바라는 바와 정책의 괴리가 매우 심각함
- 안행부 차관님, “성 평등 정책”이 곧 출산 대책이라는 정책 입안 관료들의 마인드 리셋 절실하다고 보는데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 - 인사혁신처 등과 공동으로 적어도 저출산대책 담당 공직자들만이라도 저출산 원인과 대책을 보는 공직사회의 인식전환 교육 등을 추진하고,
 - 저출산대책의 원인과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?
 - * 남녀 임금격차 : OECD 최고 (남성 대비 68%)
 - * 여성 대학진학률 : 74.6% (남성 대비 +7.4%)
 - *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: 57.1% (OECD 평균 62.8%)
 - 30대 여성 56.9%, 30대 남성 90.9% : 취업실패, 경력 단절 심각
 - 대졸 여성 64.1% (OECD평균 83.3%)
 - *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: 41%(10명 중 4명 비정규직)

* 서면답변서

(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)

권미혁 위원
질의에 대한 답변

< 권미혁 의원 >

인구정책총괄과

1. 저출산·고령화기본법 시행 이후, 지난 10년간 15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였다고 보여지는데,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으셨습니다.

○ '05년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 및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출범, '06년부터 3차에 걸친 5개년 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을 통해

* 저출산 분야 재정투자('06~'15) : 총 80조원, 재정투자의 약75%가 보육 투자

- 국가책임보육 실현 등 저출산 극복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고, 출산율 1.08쇼크를 벗어난 것은 일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○ 다만, 보육인프라 확충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결혼·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고용·주거·교육 등 구조적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저출산 추세를 충분히 반전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.

○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3차('16~'20) 기본계획은 청년고용 활성화,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, 일·가정 양립의 일상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강화했습니다.

< 권미혁 의원 >

인구정책총괄과

2. 제3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의 '16년도 목표 합계출산을 1.27명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데,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-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청년실업 심화, 메르스 사태 등 임신연기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,
 - '16년 출생아 수는 40만명대 초반으로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- 출생아수 감소 추세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나, 출산을 추세를 반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.
 - * (주요 대책) ① 난임시술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(아빠의 달 둘째아부터 급여상한액 150→200만원) ③ 보육·주거 등 다자녀 지원 강화
- 향후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 활성화, 신혼부부 주거대책, 돌봄 사각지대 해소, 중소기업 일·가정 양립 지원 등 핵심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권미혁 의원 >

인구정책총괄과

3. 3차 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인 '20년까지 합계출산율 목표가 1.5명인데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, 이러한 합계출산율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.

- 합계출산율 1.5명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목표치이며, 향후 지속적 대책 점검·보완을 통해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정부는 효과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이 재편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한편,
 - 그간 미흡했던 일·가정 양립, 청년고용·주거 등 결혼지원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

< 권미혁 의원 >

인구정책총괄과

4.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-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대비 공동 소관부처인 여가부-법무부-복지부의 활동 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- 가족 형태는 달라도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3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입니다.
-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강화 등 지원대책을 내실화* 하고, 비혼·동거 가구 등에 대한 사회·제도적 차별을 규명하기 위한 정책연구** 등을 추진하였으나,
 - *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: 연간 ('16) 180만원 → ('17) 204만원, 보육-주거 통합 전용시설 설치 등
 - ** 다양한 가족의 출산·양육실태와 정책과제: 비혼·동거가족 중심('16. 보사연)
-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계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,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.
- 향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·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
 - 사회 전반에 걸친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권미혁 의원 >

보육정책과

5.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양육, 유치원 등 양육/보육 형태별로 영유아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총 보육 비용과 정부의 비용보전 수준을 비교점검하고, 정부 보전 수준 상향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- 영유아 부모님들의 양육부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,
 - 보육실태조사결과는 보육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
* 전국보육실태조사 실시 시기 : '04년, '09년, '12년, '15년

-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은 자녀에 대한 양육철학, 양육시설 및 방식에 대한 선호도, 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,
 - 무상보육·교육 도입 등 정책적 노력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.

* 월평균 부모 보육·교육비 : ('09년) 198천원 → ('12년) 162천원 → ('15년) 96천원

- 앞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< 권미혁 의원 >

인구정책총괄과

6. 영아를 포함하는 "아동수당" 등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.

-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을 통해 보편적 양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 - * 저소득 가구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환급형 소득지원제도(자녀 1인당 최대50만원 지원, 100만 가구 6천억원 지원)
- 이는 인구규모를 감안할 경우, 아동수당을 도입한 일본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지원이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.
 - ※ (일본) 아동수당 22조엔, 보육지원 0.9조엔 등 총 3.1조엔
 - (한국) 보육 11.2조원, 기정양육수당 1.2조원, 자녀장려금 0.6조원 등 총 13조원
 - 우리 인구가 일본(1.27억)의 40%수준으로 인구 대비, 재정지원 규모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
- 아동수당 도입은 막대한 재원*이 소요되는 문제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
 - * 박광온 의원안 연 평균 15.3조원, 김광수 의원안 연 평균 16.6조원 등
- 영아를 포함할 경우, 무상보육 등 기존 지원체계와의 조율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.
- 또한, 아동수당은 역사적으로 저출산대책이라기 보다는 아동 빈곤 대책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 권미혁 의원 >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,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

7. 2013년부터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등을 통해 추진하던 “유보통합”이 제3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- 제3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에 유보통합은 포함되어 있으며 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<붙임>과 같이 제출합니다.

<붙임> 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<붙임>

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I. 추진배경

- 유치원·어린이집 구분없이 어느 시설에서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간 격차 해소와 이원화된 관리체계 통합 추진

< 유보통합추진계획, '13.12 >

단계	주요내용	과제명
1단계	품질개선기반 구축	결제카드·정보공시·평가체계 통합, 공통재무회계규칙 제정 등
2단계	규제·운영환경 정비	가격규제 개선, 시설기준 정비, 0~2세 유치원 허용 등
3단계	관리부처 통합 등	관리부처 통합, 교사 자격체계 및 보수체계 정비

II. 추진실적

□ 유아학비·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

- (기존) 유아학비와 보육료 결제카드가 이원화*되어 유치원·어린이집간 이동시 신규카드 발급 등 학부모 불편 초래

* 유아학비 : 아이즐거운카드, 보육료 : 아이사랑카드

- (개선) 결제카드를 하나로 통합 (아이행복카드)하여 학부모 불편 해소

* 통합카드 발급·서비스 제공 ('15.1월)

□ 유치원·어린이집 정보공시 연계·통합

- (기존) 유치원·어린이집이 개별 사이트*에 각각 정보를 공시, 공시항목도 상이하여 학부모가 시설을 비교·선택하는데 제약

* 유치원알리미(e-childschoolinfo.moe.go.kr),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(info.childcare.go.kr)

- (개선) 기존 공시항목 중 공통항목을 추출하고, 학부모 관심사항을 반영한 통합항목*을 마련하여 정보공시

* 학급(반) 현황, 교직원, 교육·보육과정, 교육·보육비, 건강·영양, 안전관리 등

- 우선 각 개별사이트에서 공시정보 상호 비교·검색이 가능하도록 '15.12월 조치완료 (관리부처 통합 후 단일 사이트로 통합)

□ 가격규제 제도개선

- (기존) 유치원·어린이집의 가격규제가 상이*, 일부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유치원비 인상으로 학부모 부담 가중

* 사립유치원비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, 어린이집은 가격상한제

- (개선)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'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' 마련('15.9)

- 사립유치원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

* '16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: 1% 상한 시행

□ 유치원·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

- (기존) 유치원·어린이집 간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학부모가 기관을 선택하는데 제약, 기관간 경쟁 촉진에도 한계

- (개선) 유치원·어린이집에 공히 적용될 공통 평가지표 선정, 평가방법 개발 등 평가체계 통합방안 마련('14.12)
- 시범사업('15.4~'16.2) 이후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·확정('16.6), 관련법령 개정 등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중('17년 시행)

□ 0~2세 유치원 취원 허용

- (기존) 유치원·어린이집 취원연령 차이*로 인해 자녀가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등 학부모 불편, 어린이집 부족지역의 경우 영아보육 곤란
- * 유치원 : 3-5세, 어린이집 : 0-5세
- (개선) 우선적으로 농어촌 등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서 0~2세 유치원 허용, 추후 단계적 확대여부 검토하는 방안 마련('15.9)
- 시범사업('16.10~)을 거쳐 관리부처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

□ 시설기준 정비·통합

- (기존) 유치원·어린이집의 시설기준(안전시설, 놀이터, 필수실 등)이 서로 다르고, 안전에 대한 기준이 일부 미비
- (개선) 영유아용 피난기구·경보설비 설치 의무화, 실외 놀이터* 확보, 교사실·조리실 등 필수실 의무화 등 시설기준 정비방안 마련('15.9)
- *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되, 20인 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체 놀이터 허용
- 원칙적으로 신규 기관에 적용하되, 안전 기준은 일정기간 유예 후 기존 시설에도 적용(교육부·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 중)

□ 유치원·어린이집 재무·회계규칙 정비

- (기준) 유치원·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재무·회계규칙이 상이*하여 투명한 수입·지출 구조 확인 장치 미흡

* 유치원 : 법인이 운영하는 초·중등학교 중심의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준용
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

- (개선) 영유아 교육·보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공통 재무·회계규칙 정비를 통해 재정 투명성과 회계 편의성 확보

* 개정 재무·회계규칙 시행 예정 ('17년)

Ⅲ. 향후계획

- 1, 2단계 기 마련된 통합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철저히 추진
- 3단계 과제 (관리부처 통합, 교사 자격·처우개선)는 1, 2단계 정착상황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